

데스크시각



장필수 제2사회부장

광주·전남 상생 과제 가운데 최대 난제는 광주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이 문제의 해법 찾기에 나섰다...

공항공정 해법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치단체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공항은 민간공항과 함께 소음 피해의 주범인 군공항 이전까지 겹쳐 있어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렵다.

광주공항 이전은 4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 광주시와 전남도뿐만 아니라 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및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 등 기초 자치단체, 이들 4자가 접점을 찾아야 하는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방정식을 풀려면 뭔가 매듭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얽힌 실타래와 같아서 쉽지 않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초 내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은 민간공항 이전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말았다.

특히 광주시는 얼마 전 시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놓고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광주 시민 80%가 '군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공항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근거로 군공항과 민간공항 연

4차 방정식 '광주공항 이전' 해법을 찾아라

계 이전이란 카드를 전남도에 들이밀 태세다. 하지만 전남도는 민간공항만 받겠다며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시군을 실득할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요즘 정치권은 물론 영남권을 들추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문제에서 광주공항 이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신공항 부지로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를 선택하면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 김해 신공항을 지지했던 대구·경북 주민들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야권에서는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를 갈라치기 하는 '공항 정치'라며 비난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은 전액 국비

어찌 됐든 가덕도 신공항 조성비는 전액 국비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 조성을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을 보면, 영남권 신공항과 함께 서남권 신공항(무안) 등 권역별 거점 공항에 정부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항 이전 비용을 광주공항 부지 개발비로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안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옛그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시한 광주공항 해법도 눈길을 끈다. 강 전 수석은 그제 유튜브로 가진 온라인 토론회에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해 무안을 '공항 복합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서남권 거점 공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의 신선한 제안도 눈길

또한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방부 계획에 비해 군공항 부지는 30% 줄이고 완충지대는 일곱 배 넓히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4차 방정식의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빅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일부에선 광주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단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반갑다. 또한 절만하면 답보 상태에 놓인 광주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대중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동남권신공항이 불을 지핀 정치권의 부진한 움직임과 지역 유력 정치인의 해법 제시가 광주공항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 광주 시장과 전남 도지사가 화답해야 할 시점이다.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고성혁 시인

내가 사는 부촌동 마을 앞에는 지석강이 흐른다. 그 지석강을 따라 동네 어귀에서 오래된 여관까지 2.5킬로미터의 강변 길이 있다. 그곳에 지금 겨울이 내려앉고 있다.

서쪽 산봉우리 위에 태양이 눈부신 빛을 뿜으며 백열 등처럼 떠 있다. 해는 곧 떨어지고 지평선 위 산자락이 선홍빛으로 물들면 떨어져 내린 가을 잎들이 사방에서 출렁인다.

가을이 온다며 떨리는 것발이다. 비산하는 잎들이 가슴을 파고든다. 슬며시 추억과 사랑과 애상이 몸을 세운다. 파문은 고요하게 구부러진 강과 강가 물을 수놓는, 무수히 흘러넘치는 갈대와 희디흰 억새물에 부딪힌다.

같은 쓸쓸하다. 사람도 차도 없다. 걸음을 옮기면 넓

강변 산책

은 보에 고여 있는 강물. 그 안의 물결과 굽이지며 흐르는 물살을 따라 흔들리는 바람을 본다. 오른쪽으로 뚝은 산길에 꼬부라져 있다. 오래 전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데 이제 흔적만 남았다.

제 모습을 숨긴 채 부수고 해체하는 시간. 이제 그 시간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나이에 이르렀다. 저절로 큰 숨이 내쉬어진다. 빗발처럼 부딪는 갈매나무를 피해 강변으로 다가선다.

이제는 버스를 볼 때마다 손을 흔든다. 내가 나에게 인사하듯. 내 과거에게, 과거 속의 기쁨과 슬픔에게 인사를 건넨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마주 손을 흔들며 준다. 어떤 이는 경례까지 한다.

음에 수련거렸다. 유한한 삶, 모든 유한한 것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 떠나지 않는 미련과 변민.

금곡마을을 지나간다. 어둑밤이 내려앉은 그 속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숨은 듯 풍을 퐁고, 어느 때는 백발의 노인이 다리 위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마침내 버스가 온다. 화순 218번 근대버스다. 머리엔 노란 불이 켜져 있다. 어둑이 내려앉은 강변을 휘돌아 오는 버스의 노랑 불빛. 더 밝게 빛나는 버스 안 텅 빈 풍경.

이제는 버스를 볼 때마다 손을 흔든다. 내가 나에게 인사하듯. 내 과거에게, 과거 속의 기쁨과 슬픔에게 인사를 건넨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마주 손을 흔들며 준다. 어떤 이는 경례까지 한다. 산책의 끝이다. 대숲이 수수수, 맑은 소리를 낸다. 대숲에서 푸드덕거리는 새들. 잠자리를 찾으려는 듯 댓잎을 차며 난다.

기고



이정서 조산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아동 그룹 홈(group home)에 입소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 보호의 세계적 흐름과 유엔(UN)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소규모 가정 보호 형태를 아동 복지법상의 아동 복지 시설로 법제화하여 제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 보호 형태는 대형 시설형이 주류를 이루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997년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고, 2004년 아동복지법에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법제화되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 보호 형태는 대형 시설형이 주류를 이루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997년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고, 2004년 아동복지법에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법제화되었다.

첫째, 아동 그룹 홈은 가정 환경과 유사한 생활 속에서 아동이 꿈을 키우며, 바르게 성장하는 아동 복지 시설이다. 즉 부모의 이혼·사망·가출·별거·수형 등 다양

'아동 공동 생활 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하다

한 사유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여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자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다양한 이유로 친부모와의 이별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심한 학대나 방임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 아래 정서적·심리적 치료를 받는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보호·양육은 물론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을 대상으로 시설 환경 및 운영, 아동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3대 영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 대상은 전국적으로 475개소이고 광주는 28개소, 전남은 35개소이다.

이들 고려했다면 아동 그룹 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동 양육 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아야 하고, 사회 복지 시설 간 형평성에 맞는 제도적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그룹 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장 권고를 하였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확실한 예산 확보나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오면서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사실상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복지 수준이나 처우는 타 복지 시설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공동 생활 가정 종사자는 수당도 없고, 호봉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들 고려했다면 아동 그룹 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동 양육 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아야 하고, 사회 복지 시설 간 형평성에 맞는 제도적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그룹 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장 권고를 하였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확실한 예산 확보나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의 많은 종사자들에게 전문 자격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실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은 공동 생활 가정의 시설장과 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감도 더 높일 수 있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社說

환경시설 갈등 해법은 '소통·공개 행정'이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장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선호 및 혐오 시설 설치에 따른 이른바 '남비'(NIMBY)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은 고흥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준공 이후 2년 넘게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광주시청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주 생활 폐기물로 만든 고흥연료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준공 이후 2년 넘게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광주시청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주 생활 폐기물로 만든 고흥연료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익산청 '서창동 침수 원인' 규명 왜 기피하나

지난여름 광주 서구 서창동 일대 침수 피해를 놓고 행정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 서구청과 익산국토관리청이 서로 '내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창동 일대 주민들은 새벽부터 마을로 유입되는 영산강 배수통문을 닫아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지만 비가 그칠 때까지 닫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주택·상가도 침수됐다.

배수통문을 여닫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서구청은 자동으로 닫히는 배수통문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수동 조작도 불가능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원인 책임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원인 규명까지 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뤘다.

배수통문을 여닫는 역할을 맡고 있는 서구청은 자동으로 닫히는 배수통문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수동 조작도 불가능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원인 책임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원인 규명까지 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뤘다.

왜 배수통문이 작동되지 않았는지 알아

해상에 해상풍력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허가하자 주민들이 어항 황폐화를 초래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은 모두 395건에 달한다.

이 같은 갈등은 대부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당국, 추진 주체, 지역 주민 간 원활한 소통이나 설득 및 합의 과정이 미흡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환경 기조시설이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불쾌감은 물론 소음·진동·악취 등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는 물론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야 책임 여부를 따질 텐데 정확히 가려진 게 없다 보니 주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같은 주민들의 하소연을 접한 어느 배수통문 설치 업체가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갖춰 놓고 배수통문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직접 시연해 보자며 서구청에 제안했다.

그러나 익산청은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 배수통문 작동 여부를 시연할 업체가 배수통문을 이미 설치한 업체의 경쟁회사라 편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불참 이유였다. 서구청도 익산청에서 불참을 통보하자 시연회를 취소했다.

주민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서구청이나 익산청이나 도민개개인 셈이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설물의 오작동 원인을 규명해야 할 두 기관이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모습은 불행사이다. 특히 익산청은 업체 입장만 생각해 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길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왕래도 잦아지고 교류도 활성화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조한 말이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203.7km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km로 달려 영호남을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

달빛내륙철도는 이러한 나후 지역의 발전 기회를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기도 하다. 수십 년 이어 온 영호남의 현안 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을 간과한 면도 있다. 이때문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만 광역 철도망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충청 이남의 동서를 잇고 있는 지자체들은 낙후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이러한 나후 지역의 발전 기회를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기도 하다.

으로 반영되는 것이 철도사업이긴 하지만, 달빛내륙철도만큼은 '영호남 화합'이라는 점에서 서구적으로 유발·잠재 수요 등이 평가 항목

동서 공동체 회복 같은 화합 비용 등이 우선 반영되었으면 한다.

영호남은 과거 협준한 산맥으로 갈라져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어렵다 보니 지역 간 편견과 갈등의 벽도 높았다. 하지만 광주와 대구는 꾸준한 달빛 동맹 교류를 통해 그 벽을 허물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진정한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맞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시기를 보다 앞당겨야 할 것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